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대안)

의안 번호	5617
----------	------

제안연월일 : 2013. 6. 24.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2013년 3월 26일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등을 왜곡하여
기술·표기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것에 대하여 이
를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그릇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해당 사회과 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재천명하며, 일본 측의 거듭된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됨은 물론 전반적인 양국 관계에 부정
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일본군 ‘위안부’,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징용·징병’ 등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기술이 삭제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것에 대해 이를 미래세대에 비뚤어진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그릇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일본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정당과 내각이 일본 정부가 1982년 검정 기준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근린제국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근린제국조항’을 교과서 기술·검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행위는 한·일 양국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양국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잘못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더욱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아시아 여러 나라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일본의 역사왜곡과 잘못된 영유권 주장 움직임을 주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기대한다.

제안경위

2013년 4월 17일 이학재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 바로잡기 결의안”과 2013년 4월 18일 유기홍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왜곡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이 2건의 결의안을 각각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2013. 6. 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위 2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제안이유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3년 3월 26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개최하여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21종을 검정·승인했음. 21종 가운데 15종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종전보다 3종이 더 많아진 것임. 특히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독도를)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표현을 적시하는 등 교과서 내용의 독도 왜곡이 심화되었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 검정·승인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미래의 양국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처럼 일본 정부가 왜곡된 사실을 수록한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직시해야 하며, 일본 정부는 즉시 관련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임.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일본의 역사 왜곡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며, 다른 나라의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상이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임.